

이슈브리프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문제점과 전략

한 경 구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

조 선 주 | 본원 연구위원

민법 개정을 통한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박 복 순 | 본원 연구위원

한국의 성평등, 1등 국가들과 거리는?

전 기 택 | 본원 연구위원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문제점과 전략

한 경 구¹³⁾

들어가기

한국은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명, 전체 인구의 2%를 넘으면서 급속하게 다민족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소위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한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경험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상황,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등이 보도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여러 시민 단체와 정부 부처의 노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도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각종 학술대회가 열렸고 연구 프로젝트도 다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8월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의 단일민족 강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여 국내에서 당혹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우려는 한국 정부가 이곳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민족적(Ethnic)으로 동질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소수민족문제에 대해 경험이 없으며, 민족적 동질성의 기반을 이루는 ‘순혈’ 원리가 ‘혼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즉 한국 정부가 민족적 동질성을 당연한 사실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다민족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입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외치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이 마치 그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것처럼 간주되고 있지만,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극히 피상적이며 자의적인 것 아닌가? 다른 문화

13)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에 대한 이해나 관용이라는 것도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다분히 온정주의적이며 시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다문화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강력한 자기 문화 중심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동화 정책이 단지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이 단지 수단으로만, 즉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단일민족주의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린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선택한 새로운 옷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이민국가라는 서구의 특수 상황에서 발전한 다문화주의 이론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검토가 없이 다문화주의 담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과 정책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에 부합되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상황에 부합되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한국의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적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다문화주의는 종종 문화를 마치 고정된 사물인 것처럼 취급하며 문화적 경계를 고착시킨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다문화주의는 또한 문화 간 만남의 역동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경계를 건너는 개인들의 주체성과 역할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문화인류학자들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단적 성격을 강조하는 인류학의 문화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인류학에서 문화는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학습된 것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는 『국경을 넘는 방법』에서 문화의 개념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문화’ 개념이 근대 국민국가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니시카와에 의하면 진보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문명(Civilization) 개념은 선진국인 프랑스라는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이며, 반면에 문화(Culture, Kultur)는 후진국인 독일이라는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한 문화 개념을 문화인류학자들이 세계 여러 부족과 민족에 적용하는 가운데 문화 개념으로부터 국가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문화라는 관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니시카와의 주장이다. 그

르므로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을 논의할 때에도 국가라는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화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인간 집단은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의 문화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한 문화들과 여러 문화 특질(Culture traits)을 공유할 수는 있으나, 각 문화는 문화특질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인류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패턴’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바 있다. 즉, 마치 같은 색실들로 짜더라도 서로 다른 무늬를 가진 옷감처럼 문화 역시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지더라도 상이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문화, 흔히 국민문화와 동일시되는 문화는 다른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독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문화는 국가의 영토내의 인민들을 통합하고 동질화하여 국민들 형성하며 독특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문화는 지극히 질투가 강하며 집요하다. 또한 편집증적이기도 하다. 국민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완전한 충성과 순응을 요구한다. 이중적 충성, 즉 자기 문화의 구성원이 타문화도 동시에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탈은 용납되지 않으며 비정상(Abnormal)으로 취급된다.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가 순응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응징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문화의 상호의존성이나 보편적 가치 등을 외면하고 자기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문화국민주의(문화민족주의)는 국가 및 국민 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기 쉽다. 문화적 차이는 근본적 차이로 간주되며 따라서 문명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된다. 이에 대해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양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문화 간 이해 및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 또한 문화가 상호 독립적이며 경계가 뚜렷하며 개인은 모두 어느 한 문화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론을 신봉하건 또는 문화 간 대화론을 지향하건,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그들’, ‘문명 대 야만’, ‘유럽과 비유럽’ 등의 이항 대립 구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니시카와 나가오 교수가 제기한 사문화(私文化, 와타쿠시 분카) 개념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출구를 제공해준다. 니시카와 교수는 문화의 창조적 과정에 주목하면서 문화의 주체로서 개인을 강조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문화에서 성장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화의 가치나 세계관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은 당면한 실존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단순히 자신의 문화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거나 연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가 세계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여러 방법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자신의 문화가 대단한 성취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자신의 문화 또한 불완전하며, 모순에 가득 차있으며 또한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개인은 세계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대안적 방법들을 제시하는 다른 문화적 전통의 존재를 알게 될 수도 있다.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문화화(Enculturation) 되기 때문에 문화의 수인(囚人)이 되기 쉽지만, 계속 문화의 수인으로 남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른 문화의 존재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문화의 속박을 넘어 여러 다른 가치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일종의 해방을 가능하게 해준다. 개인은 자기가 태어난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일련의 가치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사문화는 다른 문화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태어난 문화와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개인이 자기 자신이 태어난 문화를 넘어서서 다른 삶의 방식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때, 자기 문화가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회의와 상대화, 문제 제기와 비판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계몽시대의 경우 몽테스키외는 사람들이 법이니 규범이니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이 기후나 환경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여러 다양한 다른 문화들을 검토한 결과였다. 아득한 원시시대를 상정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사회나 국가의 존재 자체마저도 삶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의 결과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며 왕권의 신성성은 부인되고 만다. 이렇게 타문화의 존재는 자기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또한 문화 구성원의 해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주의나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감수해야하는 불편함도 아니며 우리가 이해하고 존경해야만 하는 차이도 아니다. 다문화 상황은 오히려 일종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다문화 상황은 우리가 태어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다른 문화의 존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문화를 성찰하고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문화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닫도록 해준다. 진정한 자신과의 대면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다른 문화의 존재들이다. 다문화주의, 즉 국민국가의 국경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은 따라서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문화가 국민국가나 혼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

며 또한 그 경계를 질투에 불타는 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의 경계를 잘못 넘으면 반역이 되거나 전전의 일본에서처럼 비국민(非國民, 히코쿠민)이 되고 혼인의 경계를 잘못 넘으면 간통이 되며 문화의 경계를 잘못 넘으면 일탈, 비정상, 바나나(전후 일본에서 서구 문화에 경도된 사람을 경멸하면서 사용된 표현) 등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한편 우리들은 또한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양심과 마찬가지로 신앙이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은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우리는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찾아 자기의 문화와 국가의 경계를 넘고 있다. 다문화 상황이란 다른 문화를 관용하고 존경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다.

다문화 상황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 현대 한국사회를 바라본다면 다민족 사회로의 진전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는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그들’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문제가 된다. 제도를 정비하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우월의식과 열등감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단일민족의식과 순혈주의를 문제시하고 있지만 순혈주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우월한 문명의식이다.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혈통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집안 차원의 문제였지, 민족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시대는 중화문명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문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화왜인이나 여진인 등 귀화인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풍속을 따를 경우에는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였다. 차별은 민족적 혈통 자체보다는 문명의 성취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귀화성씨에 대한 차별보다는 같은 민족에 속하는 천민이나 노비 등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의 민족주의, 특히 독일의 후진적 민족주의가 역시 후기 발전 국가인 일본을 통해 들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군과 기자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는 삼한정통론에 표현되었던 중국에 못지않은 오래된 역사와 문명화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외래인 기자는 한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단군의 자손’은 생물학적 의미처럼 해석되기에 이르러 순혈주의 단일민족론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근대화 및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의 좌절과 치욕은 그 반동으로 우수한 민족문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을 낳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현대 대한민국의 문화적 지평은 조선시대보다 협소해진 감도 있다. 소위 혼혈에 대한 인종적, 혈통적 편견과 차별의 불합리성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뿌리 깊은 우월의식(이는 열등감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다문화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 자신의 자기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내지 평생교육 등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 결혼이주자의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접촉하는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사회 주민 등에 대한 교육이다.

2. 학교현장

유치원과 학교 현장은 이미 다문화자녀들의 등장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교사들은 다문화자녀들을 교육하고 이해하고 지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놀림과 차별, 온정주의 등 다양한 태도와 반응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급작스럽게 관심이 고조되고 다문화자녀들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실천으로 교사도 학생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손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교는 일종의 숨겨진 교과과정(Hidden Curriculum)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교과과정이라 인식되지 않지만 학생은 학교의 건물 배치와 구조, 여러 다양한 의식, 신체의 예절과 훈련 등 다양한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훈련, 전문가의 도움 네트워크, 교육과정의 개발, 학부모들의 협조와 이해 등 여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자녀들은 사회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 자본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면한 적응은 물론 상급학교 진학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3. 지역사회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이건 결혼이주자이건 정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의 공무원이나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 주민들이 차별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문제들을 단순히 언어소통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한국사회로의 동화가 완성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나 인권에 대한 무감각·무신경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인권 감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결국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노동 현장의 문제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인력은 이미 2006년 중반에 적어도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등 각종 권리 침해는 상당히 널리 보도되고 있으며 시정의 목소리가 높지만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는 단지 이들이 외국인이라서, 언어가 부자유스럽고 한국의 법규와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이들이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걸핏하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력 이용 방식의 변화와 노동현장에서의 인권 보장 일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집중적 노력과 동시에 이 문제를 보다 큰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노동의 유연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여러 다른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연대를 도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5. 캐리어 발전: 취업과 병역 등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취업에 대한 지원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자녀들의 병역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혼인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들의 자녀들도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문화 자녀의 입장에서 다문화자녀들의 적응과 생활의 문제를 생각하고 조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장기적 전망과 대책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주자의 증가가 향후 이러한 형태로 계속될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종류와 규모가 변화할 것이며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이나 각종 지원 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출신국가 등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록 구체적인 규모나 종류는 상이하겠지만 외국인 거주자가 증대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결혼이주자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다문화상황을 고려한 상당히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사회의 내부적 타자에 대한 관용을 증가시키고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며 한국의 인권 전반을 신장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와 문화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단지 외국인과 외국 문화를 일부 받아들여 우리 경제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혼이주자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문화상황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사회내의 타자, 소수자, 그리고 이주외국인 자신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협조 네트워크나 거버넌스의 발전이 필요하다.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

조 선 주 ¹⁴⁾

들어가며

2008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¹⁵⁾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제도이다. 기존세액공제제도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납부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라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가구에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지원액도 많아져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EITC는 다양한 조세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 시행중인 국가들 역시 명칭뿐 아니라 내용과 대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의 일환이라는 맥락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¹⁶⁾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과 절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¹⁷⁾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¹⁸⁾ 이에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4대 보험’의 3중 구조(3-Tier)로 확충된 사회안

14) 본원 연구위원

15) EITC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보전제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2005년 8월 명칭 공모를 통해 당선된 ‘근로장려세제’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한특별법 제 100조의 2에 명시된 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른다.

16)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WTC & CTC: Working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프랑스(PPE, Prime pour l'Emploi)·벨기에(WTC: In-Work Tax Credit)·호주(FTB & WC: Family Tax Benefit 및 Working Credit)·뉴질랜드(FA: Family Assistance) 등을 들 수 있다. 단, 대상과 급여액 산출방식 등은 차이가 있다.

17)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working poor)을 의미한다. 근로빈민·노동 빈민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EITC가 차상위의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근로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18) 차상위계층의 임금근로자 87%가 임시·일용직으로,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29%·고용보험 25%로 일반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가입률도 각각50%·99%로 일반층의 75%·1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망의 기본 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관할부처의 차이, 효율성과 빈곤완화목적의 균형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충분한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성가구주 및 한 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빈곤층(근로능력자)의 규모는 약 132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찰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라고 보고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4).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설계되어 있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전체 가구주의 18.5%, 2005년 19.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 및 여성가구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양성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서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근로장려세제의 초기 시행모형은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최소화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과약 수준·재정여건 및 제도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 등 시행착오를 감안한 것이다.

근로자적용단계인 1단계(2008~2010년)는 18세 미만인 아동 2인 이상을 부양하고, 부부 연간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채는 산정되지 않으며,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2011~2013년)에서는 아동 1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 확대단계인 3단계(2014년부터)에 이르러서는 사업자를 포함하며, 전면시행단계인(2030년까지) 4단계에서는 무자녀가구도 적용할 예정이다.

1단계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31만여 가구로 추정되며,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10만 가구의 28% 수준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06). 2단계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90만여 가구로 추정되며, 약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150만여 가구로 추정되며,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단계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360만여 가구로 추정되며, 약 2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근로자적용단계		사업자확대단계	전면시행단계
	'08~'10년	'11~'13년	'14년부터	'30년까지
적용가구	아동2인 이상 무주택	아동1인 이상	아동1인 이상	무자녀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총소요예산	약31만가구 약1,500억원	약90만가구 약4,000억원	약150만가구 약1조원	약360만가구 약2조5,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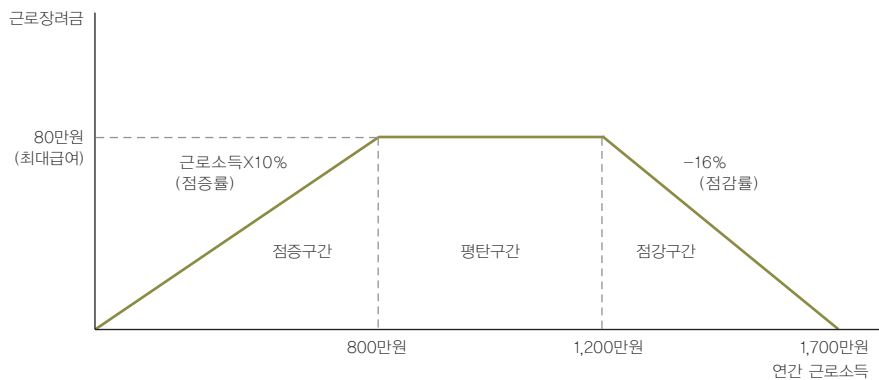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2008.

근로소득에 따른 급여수준

납부할 소득세가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근로장려금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 지급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즉, 최대 급여액은 80만원이나 실제 급여액은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원이면 근로소득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500만원일 때 50만원, 800만원일 때 최대액 80만원으로, 급여액은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연간소득이 800~1,200만원일 때는 무조건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이 1,200~1,700만원이면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받는다. 이를테면,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면 200만원의 16%인 32만원을 받게 되고, 1,600만원이면 100만원의 16%인 16만원을 받게 된다. 즉,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림 1] 근로장려금 모형



〈표 2〉 근로장려금 산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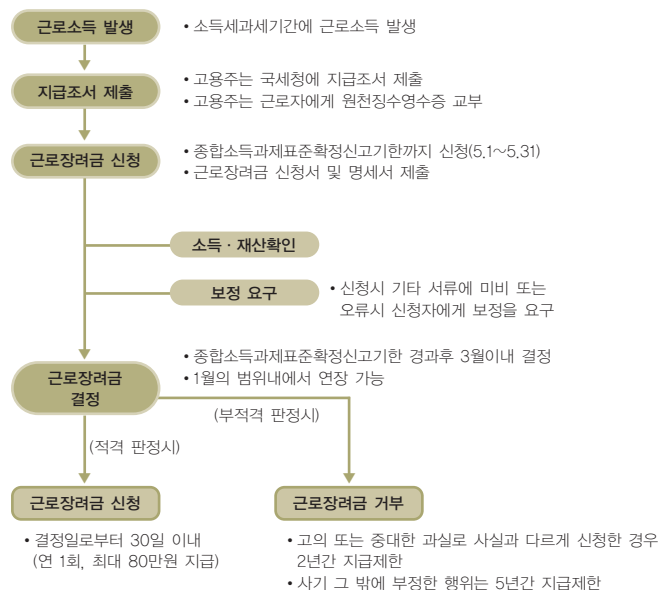
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계산근거
500만원	50만원	$500 \times 10\%$
8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500만원	32만원	$(1,700\text{만원} - 1,500\text{만원}) \times 16\%$

자료: 재정경제부, 2008.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5월)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사본¹⁹⁾)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연도 8월말까지이며, 지급결정후 3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신청연도 9월말까지 계좌로 입금된다.

〔그림 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및 지급조서 제출제도」, 2007.

19) 급여수령통장사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근로장려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므로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를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든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정소득까지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급여액도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려는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근로저소득계층은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EITC 시행후(1984~96) 편모 고용률이 58.5%에서 64.5%로 증가하였다(이중 60% 이상은 EITC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3.3%증가하는 등 가족유형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기대한 바와 달리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로남편을 둔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면 점감구간에 속하는 경우 오히려 여성들이 점증구간이나 평탄구간에 머무르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즉, 근로의욕 제고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현황을 감안할 때, 대부분 노인이거나 가구에서 돌봄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부들의 경우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효과, 행정비용 절감효과, 소득파악률 제고와 신뢰도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시행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이 수반될 때 양성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한다.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확대 및 소요재원 조달은 소득파악률 제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자 적용단계(1·2단계)에서는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 시행단계(3·4단계)

에서는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별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상과 급여액 산정·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파악률 제고가 전제 되어야 한다.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은 EITC의 전제조건이지 EITC를 통한 효과가 아니다. EITC의 급여가 높아야지만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하의 효과와 맞물려 소득을 숨기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EITC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파악은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에 있어 소득파악과 관련된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장려금 수준의 현실화 및 Targeting Group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EITC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시 상실되는 교육·의료·자활·해산·장제의 현물급여 등 가치(연간 약 200만원) 이상의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실질적인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초기 급여 상한액인 연 80만원의 현금 급여는 탈빈곤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므로 빈곤감소와 소득재분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일정액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EITC의 빈곤감소 효과·빈곤감소 효율성·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 가구에서 돌봄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부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현황을 감안할 때,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구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연령, 부부의 급여에 대한 노동시간탄력성 등에 따라 제도의 설계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수요 확대 등 경제·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의 바우처 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종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이러한 저소득 여성근로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등 경제·사회적 측면의 지원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및 지급조서 제출제도」, 2007.
- 재정경제부,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이야기”, 2008.
- 전병목,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07.11.

민법 개정을 통한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박복순²⁰⁾

시작하며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호주제 폐지로 헌법상의 양성평등 구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혼인·이혼 및 부부재산 분할 등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여러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²¹⁾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민법의 친족·상속편 외에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기간 말일의 조정 등 재산편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²²⁾, 여기에서는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민법의 친족·상속편의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러 의원 발의안이 통합되고 보완되는 과정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정부안의 일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살펴볼 때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이며 한계점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향후 법 시행과 후속 입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혼인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 혼인적령의 통일(2007. 12. 21. 시행)

개정 전의 민법은 혼인적령에 대하여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로 달리 규정하고

20) 본원 연구위원

21) 2005년 11월 9일 안홍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4일 이성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5일 문병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을 말한다.

22) 법체계의 통일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였다.

있었다. 여기에서 혼인적령이라는 말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혼인적령은 혼인하기에 적당한 연령, 즉 혼인이 가능한 연령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연히 법에 존재하는 단어이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요즘의 추세에 맞추어 법의 내용을 바꾸면서 법조문의 표제를 「혼인 가능 연령」 정도로 쉽게 풀어썼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정 민법에서부터 혼인적령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조혼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당사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건전한 혼인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연소자의 혼인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몸과 마음의 발달이 빠르고 낮은 연령에서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예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평균 초혼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남녀의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에게는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요구하면서 여성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성숙과 가사육아능력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성별역할분담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 보통 16세에서 18세 정도가 고등학교 수학연령이 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낮은 연령에서의 혼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이제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 약혼 또는 혼인이 가능하다(제801조 및 제807조). 다만, 여자의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할 경우 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혼인의 필요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에 대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2007년 12월 21일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이러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3조제3항).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2008. 6. 21. 시행)

이혼하려는 마음을 먹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쉽게 이혼할 수 있었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혼부부의 3분의 2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에서 당사자에게 폭 넓은 이혼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편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반

영한 것이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836조의1 제1항).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이혼의사의 확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다(제836조의1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기간은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836조의1 제3항).

이번 개정의 특징은 이혼의 성립에 ‘법원의 확인’ 과 ‘당사자의 신고’ 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기존의 협의이혼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혼에 관한 안내에는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이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안내를 받은 날은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논의단계에서는 이혼 후 맘 편하게 살아가기 힘든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핫김이혼’을 막고 ‘가정해체’를 방지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고,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혼인생활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좀 더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이혼 당사자들의 원만한 생활 준비를 갖추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숙려기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숙려기간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이혼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로 숙려기간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숙려기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이혼을 지연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역할이 중요하다. 이혼과정에서의 국가의 개입은 이혼억제가 주목적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이혼 후 가정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2008. 6. 21. 시행)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려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836조의2 제4항).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원만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부모의 협력이 중요한데 양육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이러한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혼 후의 양육사항은 1차적으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이다.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 후에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양육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도록 할 것인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것인가,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등이다.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에게 협의사항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자녀의 복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확인시까지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이혼의사 확인전에 먼저 법원에 양육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우선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도 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 사항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절차적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권리로서의 면접교섭권(2007. 12. 21. 시행)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법안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내용은 유보하고 있는데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인정하자는 제안에 따라 급하게 반영된 조항이다.

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²³⁾고 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격리된 아동이 부모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91. 11. 20일에 가입하여 같은 해 12. 20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7조의2가 면접교섭권을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던 것이다.

개정 민법 제837조의2의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자녀의 권리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자녀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항이다. 원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에는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돕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추구하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현대 가족법의 흐름과도 합치한다.²⁴⁾

그러나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 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남는다. 양육권을 가지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가 다른 부모의 일방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양육권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자녀가 만나고 싶어 하는 부모의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3)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24)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통권 8권)』, 10-13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으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한 것은 선언적 의미로나
 마 가족법에서의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2007. 12. 21. 시행)

부부재산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 다만, 이혼 시에 배우자 일
 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재산관
 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
 서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혼인 중 부부재산의 처분제한,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의 균등 원칙 선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등을 도입하
 는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의원 입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
 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만이 수용되었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분할의 액수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
 은 단계에 이르기 전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므로 그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면 그만이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구체수단도 존재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명문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입됨
 으로써 혼인 중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 일방의 혼인 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을 마치며

민법(친족·상속편) 개정은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고 뒤쳐져 있었다는 반대의 증거이다. 이번 민법 개정의 특징은 한 마디로 혼
 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및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은 자녀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
 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 있는 조항이고 혼인 가능한 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한 것은 혼인에서의 양성평등 구현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혼숙려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이혼 당사자들의 원만한 이혼 후의 생활

준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함께 이혼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이혼억제가 아닌 이혼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이혼 후 가정의 복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 양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제출 의무화는 양육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서에 대한 집행권원 부여라는 절차적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보완되어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찾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완벽함은 없는 듯하다. 여러 해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정부안의 여러 내용들이 이번 개정에서 누락되어 있다. 진정한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부부재산제의 보완 및 배우자의 상속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민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복순, “혼인적령에 관한 소고”, 『법조(통권 597호)』, 2006. 6, pp.129-159.
-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통권 8호)』, 2005, pp.1-46.
- 법무부, 민법(친족·상속편)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06. 6. 29.

한국의 성평등, 1등 국가들과 거리는?

-최근 주요 남녀평등지수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지위-

전기택²⁵⁾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세계 경제 포럼(WE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은 다양한 남녀평등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들 국제기구의 남녀평등지수를 통해 자신들의 성평등 상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본고에서는 국제기구들이 최근에 발표한 남녀평등지수의 1위 국가들과 한국의 격차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성평등 상황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

2007년 남녀격차지수 점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 순위는 여전히 90위권

세계 경제 포럼(WEF)이 발표한 「2007년 세계 남녀 격차(The Global Gender Gap2007)」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61.6%였던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점수는 2007년 64.1%로 2.5%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1위 국가와의 격차도 19.8%p에서 17.4%p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즉, 2006년 115개 국가 가운데 92위였던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순위는 2007년 128개 국가 중 97위로 여전히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다(〈표 1〉 참고).

2007년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하위 지수 가운데 1위 국가와 특히 격차가 큰 부문은 정치권한 부여, 경제 참여와 기회로 나타났다. 정치권한 부여 지수의 경우, 1위인 스웨덴의 점수가 52.5%인 반면 95위인 한국은 6.7%로 스웨덴에 비해 45.5%p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참여와 기회 점수는 1위 모잠비크 79.7%에 비해 90위인 한국은 58.0%로, 모잠비크에 비해 21.7%p 낮게 나타났다.

반면 건강과 생존, 교육 성취도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1위 국가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성취도 지수의 경우 한국은 128

25) 본원 연구위원

〈표 1〉 2007년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순위 및 점수

	'07 순위 ¹	'07 점수	'07 순위 ²	'06 순위	'06 점수	'07-'06 점수 변화	'07-'06 순위 변화
스웨덴	1	81.5%	1	1	81.3%	0.1%	0
노르웨이	2	80.6%	2	2	79.9%	0.6%	0
핀란드	3	80.4%	3	3	79.6%	0.9%	0
아이슬란드	4	78.4%	4	4	78.1%	0.2%	0
뉴질랜드	5	76.5%	5	7	75.1%	1.4%	2
필리핀	6	76.3%	6	6	75.2%	1.1%	0
독일	7	76.2%	7	5	75.2%	0.9%	-2
덴마크	8	75.2%	8	8	74.6%	0.6%	0
아일랜드	9	74.6%	9	10	73.3%	1.2%	1
스페인	10	74.4%	10	11	73.2%	1.2%	1
모잠비크	43	68.8%	n/a	n/a	n/a	n/a	n/a
한국	97	64.1%	88	92	61.6%	2.5%	4
1위와의 격차	-	-17.4%p	-	-	-19.8%p	-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2007.

주: 1. 2007년 순위는 128개 국가 중 순위, 07년 순위2와 06년 순위는 115개 국가 중 순위를 의미함.

2. 1위와의 격차=한국 점수-1위 국가 점수.

3. 점수는 남녀격차지수*100으로 100%에 근접할수록 남녀 격차가 없음을 의미함.

개 국가 중 94위이지만, 점수는 1위인 필리핀, 덴마크, 아일랜드에 비해 5.1%p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지수의 경우에도 한국의 순위는 106위이지만, 점수는 1위인 핀란드, 필리핀 등과 비교하여 1.3%p 낮게 나타났다(〈표 2〉 참고). 이처럼 한국은 교육 성취도 및 건강과 생존 부문에서 1위 국가와 격차가 크지 않지만, 경제 참여와 기회, 정치권한 부여 부문에서는 1위 국가와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1〉 참고).

〈표 2〉 2007년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하위 지수별 순위 및 점수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스웨덴	6	76.1%	27	99.9%	73	97.4%	1	52.5%
노르웨이	10	75.1%	17	100.0%	51	97.9%	3	49.4%
핀란드	22	72.3%	21	99.9%	1	98.0%	2	51.7%
아이슬란드	23	72.1%	67	98.7%	95	97.0%	4	45.6%
뉴질랜드	8	75.5%	19	99.9%	67	97.4%	9	33.1%
필리핀	2	78.9%	1	100.0%	1	98.0%	14	28.3%
독일	29	70.0%	35	99.5%	56	97.8%	6	37.4%
덴마크	18	73.4%	1	100.0%	96	97.0%	13	30.5%
아일랜드	48	66.7%	1	100.0%	80	97.3%	8	34.3%
스페인	84	58.9%	39	99.4%	74	97.3%	5	42.1%
모잠비크	1	79.7%	120	75.2%	57	97.8%	22	22.6%
한국	90	58.0%	94	94.9%	106	96.7%	95	6.7%
1위와의 격차	-	-21.7%p	-	-5.1%p	-	-1.3%p	-	-45.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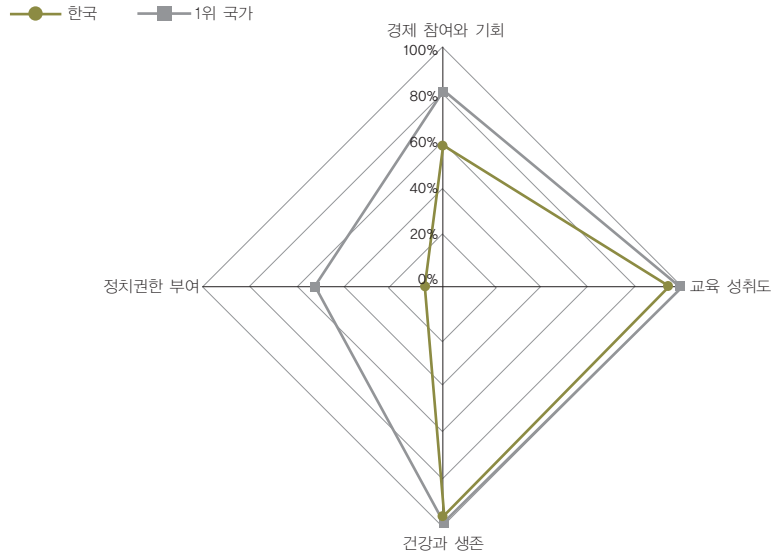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The Global Gender Gap2007.

주: 1. 2007년 순위는 128개 국가 중 순위를 의미함.

2. 1위와의 격차 = 한국 - 해당 지수 1위 국가.

3. 점수는 남녀격차지수 * 100으로, 100%에 근접할수록 남녀 격차가 없음을 의미함.

〈그림 1〉 GGI 하위 지수별 1등 국가와 한국의 격차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노르웨이와 한국의 1인당 실질GDP 격차,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커

한국 GDI 순위는 1996년 31위, 2000년 30위, 2005년 27위, 2006년 25위였던 한국의 남녀평등지수 순위는 2007년 26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다. 그리고 2007년 UNDP가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2007/2008」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평균수명은, 1위의 일본 85.7세에 비해 4.2세가 적은 81.5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취학률은 1위 국가인 뉴질랜드 115%에 비해 한국이 26.0%p 낮은 89%로 나타났다. 여성 1인당 실질GDP의 경우, 1위 국가인 노르웨이 30,749\$에 비해 한국은 18,218\$ 낮은 12,531\$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남성 1인당 실질GDP는 1위 국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의 40,000\$에 비해 8,524\$ 적은 31,476\$로 나타나, 1위 국가와의 격차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고).

〈표 3〉 2007년 한국의 남녀평등지수

(단위: 세, %, \$)

	GDI순위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초·고등 취학률		1인당 실질GDP		HDI순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아이슬란드	1	83.1	79.9	99.9	99.9	101	90	28,637	40,000	1
오스트레일리아	2	83.3	78.5	99.9	99.9	114	112	26,311	37,414	3
노르웨이	3	82.2	77.3	99.9	99.9	103	95	30,749	40,000	2
캐나다	4	82.6	77.9	99.9	99.9	101	98	25,448	40,000	4
스웨덴	5	82.7	78.3	99.9	99.9	100	91	29,044	36,059	6
네덜란드	6	81.4	76.9	99.9	99.9	98	99	25,625	39,845	9
프랑스	7	83.7	76.6	99.9	99.9	99	94	23,945	37,169	10
핀란드	8	82.0	75.6	99.9	99.9	105	98	26,795	37,739	11
스위스	9	83.7	78.5	99.9	99.9	83	88	25,056	40,000	7
영국	10	81.2	76.7	99.9	99.9	96	90	26,242	40,000	16
일본	13	85.7	78.7	99.9	99.9	85	87	17,802	40,000	8
뉴질랜드	18	81.8	77.7	99.9	99.9	115	102	20,666	29,479	19
한국	26	81.5	74.3	99.9	99.9	89	102	12,531	31,476	26
1위와의 격차	-	-4.2	-5.6	0.0	0.0	-26	-10	-18,218	-8,524	-

자료: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2007/2008).

주: 1. GDI 순위는 157개 국가 중 각 국가의 순위임.

2. 1위와의 격차=한국-해당 지수 1등 국가.

남녀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행정관리직 중 여성 비율, 필리핀이 한국에 비해 50%p 높아

1996년 78위, 2000년 63위, 2005년 59위, 2006년 53위로 점차 상승하던 한국의 GEM 순위는 2007년 64위로 하락하였다. 2007년 GEM 하위 지수별 1위 국가와 한국의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의원여성비율의 경우, 1위 국가 스웨덴의 47.3%에 비해 한국은 33.9%p 낮은 13.4%로 10%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의 경우에는 58%인 필리핀에 비해 50%p 적은 8%로 나타났다. 이것은 필리핀에 비해 8배 이상 낮은 것이다. 한편,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70%)이며, 한국은 이보다 31%p 적은 39%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소득격차가 가장 작은 스웨덴(0.81)과 비교하여 한국의 남녀 소득격차는 2배 이상 커서,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과 함께 1등 국가와 격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2〉 참고).

〈표 4〉 2007년 한국의 남녀권한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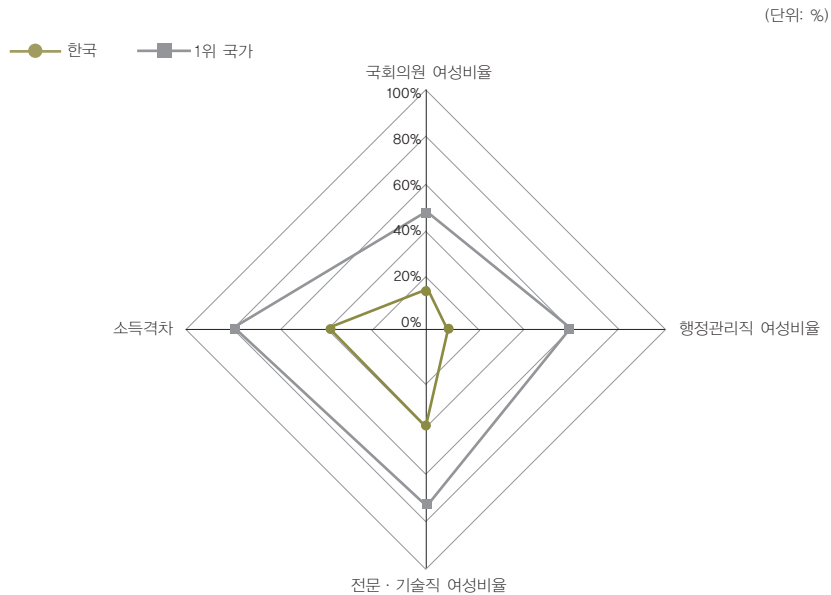
	GEM순위	국회의원 여성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격차
노르웨이	1	37.9	30	50	0.77
스웨덴	2	47.3	30	51	0.81
핀란드	3	42.0	30	55	0.71
덴마크	4	36.9	25	53	0.73
아이슬란드	5	31.7	27	56	0.72
네덜란드	6	36.0	26	50	0.64
벨기에	7	35.7	32	49	0.55
오스트리아	8	28.3	37	56	0.70
독일	9	30.6	37	50	0.58
캐나다	10	24.3	36	56	0.64
에스토니아	31	21.8	37	70	0.62
필리핀	45	22.1	58	50	0.40
한국	64	13.4	8	39	0.40
1위와의 격차	-	-33.9	-50	-31	-0.41

자료: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2007/2008.

주: 1. GEM 순위는 93개 국가 중 각 국가의 순위임.

2. 1위와의 격차는 각 지표별 한국-1등 국가를 의미함.

〈그림 2〉 GEM 하위 지수별 1등 국가와 한국의 격차



주: 〈그림 2〉의 소득격차는 〈표 4〉의 소득격차×100으로, 100에 근접할수록 1인당 실질GDP에서의 남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함.

성, 제도와 개발지수(GID: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2008년 현재 한국의 GID 순위는 8위

2006년 OECD가 최초로 GID 순위를 공개할 당시, 한국의 GID 순위는 123개 국가 중 4위였고, 2008년 3월 현재 116개 국가 중 8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GID 점수는 2006년과 동일하게 0.021이다(표 5) 참고). 이처럼 다른 평등지수들에 비해 한국의 순위가 높은 것은 GID 순위 측정 항목 가운데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진 제도들 또는 남녀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⁶⁾

〈표 5〉 2008년 한국의 성, 제도와 개발지수

	사회 제도																	성, 제도, 개발 지 수 (순위)	성, 제도, 개발 지 수 (점수)	
	가족 관련 점수	가족 관련						신체 관련 점수	신체 관련			시민권 관련 점수	시민권 관련			소유권 관련				
		평균 결혼 연령	이 혼	조 혼	일 부 다 처 제	부 모 권 한	상 속 권 한		여성 성기 절단	여성에 대한 폭력	실종 여성		이동의 자유	공공 장소에서 배일 착용 의무	소유권 관련 점수	토지 점권	여성의 은행 계좌 관리			여성의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
스웨덴	0	32	0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00
영국	0.01	26	0	2	0	0	0	0.03	0	0.08	0	0	0	0	0	0	0	0	2	0,008
독일	0	..	0	..	0	0	0	0.06	0	0.17	0	0	0	0	0	0	0	0	3	0.014
아일랜드	0	31	0	..	0	0	0	0.06	0	0.17	0	0	0	0	0	0	0	0	3	0.014
벨기에	0	28	0	1	0	0	0	0.06	0	0.17	0	0	0	0	0	0	0	0	5	0.015
네덜란드	0	30	0	1	0	0	0	0.06	0	0.17	0	0	0	0	0	0	0	0	5	0.015
오스트리아	0.01	26	0	3	0	0	0	0.06	0	0.17	0	0	0	0	0	0	0	0	7	0.016
한국	0	..	0	1	0	0	0	0.08	0	0.17	0.08	0	0	0	0	0	0	0	8	0.021
노르웨이	0	31	0	..	0	0	0	0.08	0	0.25	0	0	0	0	0	0	0	0	9	0.021
덴마크	0	31	0	1	0	0	0	0.08	0	0.25	0	0	0	0	0	0	0	0	10	0.021
프랑스	0	30	0	..	0.01	0	0	0.08	0	0.25	0	0	0	0	0	0	0	0	10	0.021
스위스	0	29	0	1	0	0	0	0.08	0	0.25	0	0	0	0	0	0	0	0	10	0.021

자료: OECD GID-DB(<http://stats.oecd.org/>)

26) 주재선(2007), 주요 남녀평등지수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표개요 및 자료

- GGI: World Economic Forum에서 2006년 발표한 지수로써 "남녀격차지수"로 번역되며,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 정도를 통해 남녀의 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GDI: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써 "남녀평등지수" 혹은 "여성관련 개발지수"로 번역되며, 평균수명, 교육수준, 평균소득 등의 차이를 통해 남녀의 평등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지수임.
-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 GEM: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써 "남녀권한척도" 혹은 "여성권한척도"로 번역되며, 의회여성 점유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배분 정도를 통해 여성의 정치 및 경제적 결정권과 경제자원에 대한 지배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지수임.
-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 GID: "성, 제도와 개발"로 번역되며, 한 국가의 사회제도가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순위화한 지수임. 지수 계산을 위해 사용된 하위 항목은 가족관련(결혼적령기, 이혼, 조혼, 일부다처, 양육권, 상속권 등), 신체관련(여성 성기활례, 가정폭력 등), 시민권 관련(거동(외출), 복식의 자유, 의회에서 여성 비율, 여성장관비율 등), 소유권 관련(토지소유, 금융자산소유, 토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 등)임.
- 자료: OECD(2006), Measuring Gender (In)Equality: Development Data Base(GID);OECD
GID-DB(<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GID&lang=en>)